

연말, 철도 대란 오나…철도노조 호남본부 총파업 예고

11일부터…코레일·SR 통합·안전인력 충원·성과급 정상화 등 요구
광주송정·목포·여수엑스포 등 운행 차질 우려…승객 불편 커질 듯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적인 ‘철도 파업’이 예고되면서 연말에 열차 운행이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는 2일 오후 7시 광주시 광산구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야간총회를 열고 “임금교섭 핵심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파업 수위와 참여 인원은 노조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예년과 비슷하게 전국 대상자 1만 5000여명 가운데 8000~9000여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지난해 파업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운행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이어진 철도노조 파업 기간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71.1%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도권 전동열차 운행률은 76.5%, KTX는 68.4%, 일반열차(새마을·무궁화 등)는 61.3%, 화물열차는 25.1%에 그쳤다.

호남권 역시 당시 파업으로 KTX·SRT 일부 편성이 감축되고 일반열차가 대폭 줄면서 광주송정·목포·여수엑스포 등 주요 거점역 승객들이 대체 교통수단을 찾느라 큰 불편을 겪었다.

당시 평일 기준 KTX, 일반열차를 포함해 호남

선과 전라선 모두 일일 기준 3분의 1수준으로 감축 운영된 바 있다.

노조는 ‘고속철도 통합(코레일·SR)’, ‘철도안전인력 충원’, ‘2025년 성과급 정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고속철도 통합 문제다. 노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코레일과 SR이 참여한 3차 간담회에서 ‘1단계 운영통합, 2단계 조직통합’을 골자로 한 통합 방향을 제시했다.

수서역과 서울역에 KTX·SRT를 교차 운행하는 방식으로 먼저 운영을 통합한 뒤, 별도 용역과 추가 논의를 거쳐 2027년 말쯤 두 기관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 2단계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안이다.

다만 노조는 이와 관련 “국토부가 내놓은 ‘선 운영통합, 후 조직통합’ 방안은 고속철도 통합의 핵심인 조직·인력 통합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안전 인력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역 열차 충돌 사고(사망 2명), 지난 8월 경북 청도역 선로점검 작업자 사상사고(사망 2명·부상 5명) 등 참사 이후 안전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조는 참사 이후 국토부 등이 ‘노·사·정 철도안전 TF’를 구성했지만, 정작 TF는 국토부·코레일 중심으로 운영되고 노동자 의견이 소외되고 있다고



2일 오후 7시 광주시 광산구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 야간총회에서 300여명의 노조원들이 정부에 고속철도 통합과 필수 안전인력 충원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 제공>

주장하고 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작업)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는 역효과 대책까지 내놓고 있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노조는 성과급 정상화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파업 당시 코레일 노사는 정부와 함께 성과급 체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성과급 기준 개선 방

안을 마련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논의가 멈춰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최소한 2026년까지 고속철도 통합을 마무리 짓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부·공사·노조가 함께 개선을 약속한 ‘성과급 정상화’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노조 호남지방본부는 전국 파업에 앞서 지난 1일 순천역에서 올해 첫 야간 총회를 열었으며, 오는 3일에는 익산역에서 다시 한번 집결할 예정

이다.

오는 11일 전주에서 열리는 권역별 총파업 출정식에 맞춰 전주 지역 국토교통부 장관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13일에는 철도노조 총파업 대회, 16일에는 호남지방본부 파업 결의대회를 연달아 개최할 계획이다.

코레일 측은 “현재 노사간 협상중이며, 교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유일한 여객선 멈출 위기…여수시, 긴급 대책 회의

선사 측, 15일까지 개선안 요구…섬 주민 통행 불편 가시화

여수시가 거문도와 여수를 잇는 유일한 여객선 ‘하멜호’가 운항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광주일보 11월 17일 7면>과 관련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선사 케이티마린, 주민 등과 협상이 결렬된데다, 선사 측이 오는 15일까지 적자 보전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운항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섬 주민들이 통행 불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수시는 3일 해양수산청, 해양교통공단, 해운조합 등과 함께 하멜호가 중단될 것을 대비한 대책

회의를 연다.

하멜호 운항이 중단되면 대체 선박을 구해야 하고, 이를 위한 행정절차도 필요할 데 따른 조치다.

선사 측은 하멜호 취항 이후 여수시에서 운항결손 보상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해 월 1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여수시는 협약에 따라 운항결손금을 올바르게 지급했는데도 선사 측이 일부 적자 항목에 대해 이중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선사 측은 “여수시와 맺은 협약서에는 운항결손액과 별도 항목으로 감가상각비·2차보전액 등을 지원받기로 명시돼 있다”며 “정작 여수시는 운항결손액에 감가상각비 등을 묶어 지급해 지원금 액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직접 경비인 유류비와 선원 임금을 주지 않는 한 적자를 면할 수가 없는 구조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수시는 “선사 측에서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선사 측이 확실하게 중단 의향을 알려주라는 공문을 2차례 보냈지만 답이 없어 뒤늦게나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조사관 기피 신청

국토부 소속 공정성 문제 제기…공청회 잠정 연기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2일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와 항공사고조사단 전원에 대한 사고조사 업무 기피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와 사조위에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사조위가 국토부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기 어렵고, 오는 4·5일로 예정됐던 공청회 개최 과정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유가족들은 사조위가 국토부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국토부 소속 전·현직 공무원 18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이른바 ‘셀프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항공철도사고조사법에서는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고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 사조위는 국토부장관이 예산, 인사 등 조직 운영의 핵심 요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에서도 사고조사기관을 항공 정책, 규제 담당 기관으로부터 기능적으로 독립시킬 것을 요

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청서에는 사조위가 국토부의 책임을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유가족에게 사고기 블랙박스(CVR·FDR) 등 핵심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지난 7월 충분한 물리적 증거와 데이터 분석이 완료되기도 전에 “조종사가 비상절차를 수행하던 중 엔진을 정지시켰다”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해 국토부 책임을 회피하고 조종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공청회 개최 전 법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는 ‘주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사조위는 항공사고조사 매뉴얼에 따른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유가족 측 주장이다.

유가족협의회는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기피 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사조위는 이날 오후 항공공분과위원회를 개최, 오는 4·5일 예정된 공청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의결했다. /윤준명 기자 yoon@

조타실 간 적 없었다…여객선 좌초 사고 선장 구속

신안 앞바다에서 무인도 좌초 사고를 낸 대형 가페리 여객선 칸제누비아2호의 선장 60대 A씨가 구속됐다.

2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증거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측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

려 등을 들어 A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여객선 좌초 사고 당시 협수로 구간에서 조타실 지휘 의무를 방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칸제누비아2호 취항 이후 사고 해역을 1000여 차례 지나면서 단 한번도 조타실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법에 따라 협수로 항해 시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하지만 사고 당일에도 조타실에 가지 않고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고 당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기고 휴대전화를 보는 등 임무를 소홀히 한 일동항해사 B씨와 조타수 C씨도 증거실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해경은 항로 이탈 알람을 켜놓지 않은 사고 해역 관제사 D씨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서민경 기자 minky@

한 사람의 보험과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스 해볼래?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익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CT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금융감독원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손해보험협회
Korea Fire Insurance Association



IGA보험GA협회
한국보험업자협회